

## 성완중 리스트 파문

# 박근혜의 위기를 이용해 연가 투쟁을 힘차게 성사시키자

9년 만의 연가 투쟁이다. 그것도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가 핵심 요구 사항이다.(물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중요한 요구다.)

물론 조합 내에는 전교조가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후불임금이자 거의 유일한 노후 대책인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교육을 지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방어와 참교육 실천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공격에 맞선 투쟁이다.

한편, 실무기구에서 구체적인 개악 정도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전투가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

그 점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개악 수단에 지나지 않는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협상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지 투쟁을 제대로 하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상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려면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을 강력하게 보여 줘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4.24 파업과 연가 투쟁을 최대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이다. 성완중 리스트 파문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 이 순간에도 새누리당은 “성완중 리스트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며 5월 6일 본회의 통과를 다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 ‘레임 덕’을 지나 ‘데드 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터진 성완중 리스트는 박근혜의 대선 자금을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정권 핵심 실세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가히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최대 위기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세월호 항의 운동도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연금 개악에 필사적인 만큼 하루 연가 투쟁으로 그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세월호-성완중 리스트 등으로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이런 정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연금 전투를 우리 편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부패 정권이 연가 투쟁을 “불법”이라 비난할 자격 없다

전교조가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연가 투쟁을 선포하자 정부는 “참가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법”으로 몰아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연가는 정당한 휴가권 사용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교사들에게 파업권이 있다. 한국 국가는 교사들의 쟁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저급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교사들의 연가 투쟁은 정부 정책에 항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 투쟁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의 연가 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최근 폭로된 성완중 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부패한 정권인지를 보여 준다. 이런 정부가 교사들에게 “불법”과 “징계”를 말



할 자격이나 있는가.

보수 언론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간다”고 비난한다.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환자의 생명을 불모로 삼는다고 하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시민의 발을 불모로 삼는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 노동자들의 조건과 교육의 질을 방어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물론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일부 수업이나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교사들에 대한 공격은 곧 교육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투쟁은 교사들의 노후를 지키는 투쟁이자 교육을 지키는 투쟁이다.

4월 24일 수업이 아니라 당당하게 연가를 선택하자!



# 박근혜: 공무원연금에 “매일 80억 원씩 투입”된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씩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국민 부담”을 앞세워 시한 내 연금 개악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80억 원이라는 액수는 올해 정부가 지원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3조 원가량을 3백65일로 나눈 것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떠올리게 하려 한다.

한국 정부의 1년 복지 지출은 1백45조 원(2013년 기준)이다. 하루에 4천억 원씩 ‘투입’하는 셈이다. 전체 인구의 0.7%(공무원 퇴직자와 유족 36만여 명)에게 복지 지출의 2%가 돌아가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반면, 매일 국방비로 1천억 원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매일 25억 원을 쓰고 있다. 복지에는 쓸 돈이 없다면서 4대강에다, 자원 외교에다 수십조 원을 낭비했다.

재정 적자를 빌미로 공적 연금과 복지를 삭감하면서도, 부자들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부자들에게 깎아 준 세금을 계산하면 매일 3백50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감면해 준 기업들의 법인세만 따져도 하루에 2백70억 원이다.

게다가 한국 공무원연금의 ‘GDP 대비 정부 총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한국은 0.6%로, OECD 평균 1.5%(2007년)에 한참 못 미친다. 2060년에 가서도 1.0%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은 공무원 노동자의 기여금 대비 1.8배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영국은 2.3배, 일본은 2.4배, 미국은 5.3배, 프랑스는 8.1배, 독일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 연금충당부채는 ‘낭비’나 빚 개념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국가 부채 증가분 93조 원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700조”에 달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다.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산출한 것이다. 정부에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할 뿐, 갚아야 할 ‘빚’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OECD 국가 간 국가 채무 비

교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대부분이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지급된다는 것과 퇴직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 ‘재정 적자’를 부풀려 불안감을 자극해 개악 여론을 부추기려는 꼼수다.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둘 다 개악을 찬성함

정부가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개악안들에 대한 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나쁜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얼른 단일안을 만들자고 야당과 공무원 단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실무기구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특위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렇듯 정부 여당은 한 손으로는 협상 카드를, 다른 손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는 합의의 모양새를 만들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전교조 지도부가 실무기구에 불참한 것이 옳은 이유이자,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실무기구에서 당장 나와야 하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그 뿐이다. 여야는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4월 20일까지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설득과 동의”라는 방식만 강조할 뿐, 공무원연금 삭감에서는 정부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자원 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맞바꾸는 빅딜을 한 바

있다. 또, 기초연금, 세월호특별법 등에서 보여 줬듯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정당이다. 당 대표 문재인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정부가 아주 용감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칭송했다. 또,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고,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 의해 폭침’당했다고 말했다.

이런 당이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지켜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수소에 젖을 달라는 것이다. 이미 자체 개악안을 내놓은 야당이 아니라 단호한 투쟁만이 개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벌떡교사들이 독자들에게

〈벌떡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교사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4면짜리 월간 신문입니다. 〈벌떡교사들〉의 호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1부 연간 정기구독료는 11,000원입니다(우편료 5,000원 포함). 5부 이상 정기구독 시 우편료는 무료입니다.

- ▶ 구독자는 정기구독자가 돼 주세요.
- ▶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주위 동료 교사들에게도 서너 부 배포해 주세요.
- ▶ 공유하고 싶은 투쟁 경험, 투쟁 전술,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죠? 그러면 기고해 주세요. [ruteachers@hanmail.net](mailto:ruteachers@hanmail.net)로 보내 주세요. 글 마감은 매달 12일입니다.
- ▶ 얼마라도 관촬아요, 후원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및 후원금 입금 계좌] 농협 356-0965-6124-13 (예금주 김현옥)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진실 규명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자!

전교조는 일찌감치 4월 24일 연가 투쟁의 주요 요구로 ‘4.16 진상규명’을 포함했다. 고무적이게도, 민주노총도 4월 24일 총과업 요구에 세월호를 추가하면서 “이윤보다 생명을, 효율보다 안전을 지키는 총과업을 벌이는 것이 노동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 요구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포함시키고 그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운동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작년 상반기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와 연금 삭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도 박근혜 정부를 더한층 밀어붙이지 못하는 바람에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통과됐다. 많은 노동자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동일시했지만, 아쉽게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계급 고유의 힘, 즉 파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그 운동에 참가하도록 조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구조, 수습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윤 경쟁 체제의 우선 순위가 노동계급 대중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잔인하게 보여 줬다. 이 체제의 수혜자들과 통치자들은 이익과 권력

으로 유착돼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가 한사코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이유다. 그래서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마저 허수아비 기구로 만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세월호 문제를 가슴속에 안고 있던 유가족들과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온전한 신체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외치며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유가족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안산~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했고, 11일에는 ‘성완종 리스트’의 주변인 청와대는 조사할 자격이 없다며 시행령 폐

기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뺏속 깊이 부패한 정부임을 보여 줬다. 국가 기관 대선 개입도 박근혜 정부가 태생부터 부패한 정부임을 보여 줬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다 부패한 자들임을 보여 줬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에 치를 떨고 지긋지긋해한다. 이제 조직 노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투쟁으로 대변할 때다. 4월 16일 참사 1주기 추모제, 4월 18일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하자. 무엇보다 4.24 총파업을 규모 있게 성사시키자.